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5월 8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우: 30108)

* 팩스/전자우편: 044-200-4977 / 60choi@korea.kr

<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 | | | |
|-------|--------------------|-----|-----|--------------------|
| 담당 부서 |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종선 (044-200-4945) |
| | | 담당자 | 사무관 | 최유경 (044-200-4947)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II. 용어의 정의</p> <p>1. ~ 6. (생략)</p> <p>(중전 III. 1. 다. 에서 ‘항’ 이동)</p> <p>* 중전 ‘사실적’은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용어 수정</p> | <p>II. 용어의 정의</p> <p>1. ~ 6. (현행과 같음)</p> <p>7.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u>실질적</u> 하도급관계</p> <p>형식적 하도급관계와 <u>실질적</u>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u>실질적</u>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가. 원사업자(A)가 <u>실질적인</u>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u>실질적</u>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p> <p>(1)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2)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3)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 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p> <p>(4)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p> <p>(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p> |

(종전 Ⅲ. 1. 다. 에서 ‘항’ 이동)

(신 설)

-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등록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와 B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1) B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 (2)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3)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 (4) A의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하여 B 또는 B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 (5) 국외의 하도급거래가 국내에서 A와 B 간 이루어진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그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

Ⅲ. 공정화지침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수리·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 나. (생략)

다. 건설위탁의 범위

(10)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 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자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Ⅲ. 공정화지침

1.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①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
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
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등
록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
으로 보지 않는다.

(삭 제)